

<부록>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안: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방안

2015년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 및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활동이 종료되었다. 여야 지도부로 넘어간 이 문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공전하다가, 결국 예정시한을 넘겨 일부 선거구만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이 타협안은 미봉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거구 관련 보다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선거구 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1:3에서 1:2로 줄이라는 현재의 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전히 '유권자의 평등권'이나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은 원래 사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옳고 그르거나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은 판사들의 몫이 아니고, 당연히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인구 25만 명(전체인구 5,000만 명을 200석으로 나눈 평균 수치, 이하 '평균인구'라 호칭함)에 1석의 지역구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안이다. 유권자의 평등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선거구 조정이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야는 2016년 20대 총선 직전 헌재결정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석을 246석에서 7석 늘려 253석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축소하였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치권이 위헌 사항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정만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기보다 기존 의원들의 기득권 보호에 앞장 선 것이다.

아래에서는 기존 의석과 헌재 판결에 따른 선거구 조정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보겠다. 그 대안은 중앙선관위 제안과 같은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전체 의석수만 제시했을 뿐이지만, 여기서는 200개 선거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해보겠다 .

<표1> 광역시·도별 지역구 의석수의 변화 및 필자의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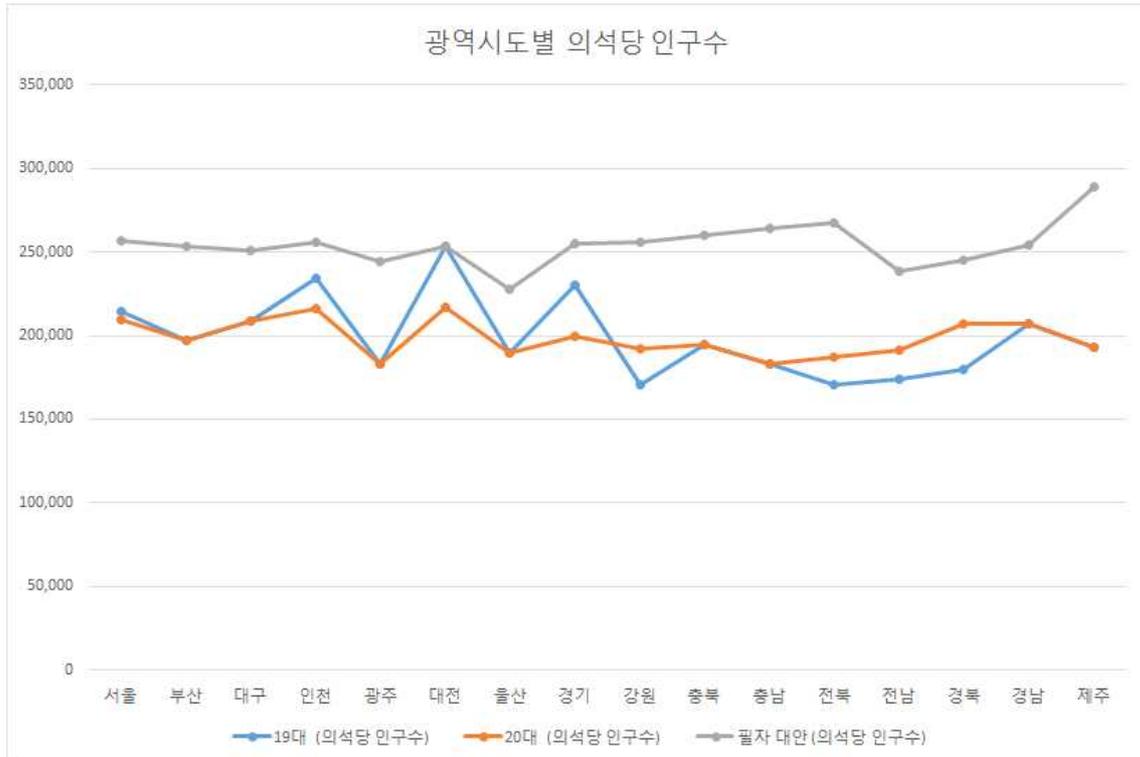
시도명	인구수 ¹	19대 의석수 (의석 당 인구수)	20대 의석수 (의석 당 인구수)	필자 대안 (의석 당 인구수)
서울특별시	10,281,774명	48석 214,200명	49석 209,832명	40석 257,040명
부산광역시	3,550,910명	18석 197,271명	18석 197,271명	14석 253,635명
대구광역시	2,509,231명	12석 209,100명	12석 209,100명	10석 250,920명
인천광역시	2,813,424명	12석 234,452명	13석 216,417명	11석 255,765명
광주광역시	1,467,451명	8석 183,431명	8석 183,431명	6석 244,575명
대전광역시	1,520,471명	6석 253,412명	7석 217,210명	6석 253,412명
울산광역시	1,138,009명	6석 189,667명	6석 189,667명	5석 227,600명
경기도	11,989,253명	52석 230,557명	60석 199,820명	47석 255,084명
강원도	1,536,846명	9석 170,755명	8석 192,105명	6석 256,132명
충청북도	1,558,132명	8석 194,766명	8석 194,766명	6석 259,688명
충청남도	2,016,097명	11석 183,281명	11석 183,281명	8석 264,456명 ²
전라북도	1,873,532명	11석 170,316명	10석 187,353명	7석 267,640명
전라남도	1,911,629명	11석 173,770명	10석 191,162명	8석 238,934명
경상북도	2,695,637명	15석 179,706명	13석 207,356명	11석 245,054명
경상남도	3,309,032명	16석 206,811명	16석 206,811명	13석 254,537명
제주특별자치도	578,731명	3석 192,903명	3석 192,903명	2석 289,354명
세종특별자치시	99,600명	1석 99,600명	1석 99,600명	-
합계	50,849,759	246석 206,706명	253석 200,987명	200석 254,248명

* 중앙선관위 자료 참조 저자 작성

¹ 2012년 총선 당시 기준

² 세종시 인구수 포함

<그래프1> 광역시·도별 의석 당 인구수 비교



앞의 <표1>과 <그래프1>를 보면 19대에서는 광역시·도별로 의석 당 인구수 편차가 심했던 반면에, 20대에 와서는 그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대안을 따를 경우, 대부분 광역시·도의 의석 당 인구수가 인구 25만 명에 수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일한 예외 지역은 울산시와 제주도이다. 편차가 심하지 않은 20대 253석과 필자의 200석 가운데 필자의 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2> 서울/인천/경기의 선거구 조정안 비교

시도명	인구수	19대 의석수 (의석 당 인구수)	20대 의석수 (의석 당 인구수)	필자 대안 (의석 당 인구수)
서울시	10,281,774명	48석 214,200명	49석 209,832명	40석 257,040명
인천시	2,813,424명	12석 234,452명	13석 216,417명	11석 255,765명
경기도	11,989,253명	52석 230,557명	60석 199,820명	47석 255,084명

<표2>에서 보듯이 수도권에서 의석 당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19대에서는 인천과 서울에서 약 2만 명 이상 차이가 났지만, 20대에서는 약 6,500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필자의 대안을 따를 경우 그 차이는 1,300명도 되지 않는다. 서울과 경기 또는 인천과 경기를 비교해도 그 차이는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그 지역의 행운으로만 돌리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명백한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대안은 각 선거구의 설정기준을 1:2의 인구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처럼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를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각 선거구의 인구수가 그 평균인구의 ±15퍼센트이내를 유지하도록 하고, 만일 ±25퍼센트를 넘게 되면 해당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인구 25만 명 당 1석으로 전체 지역구를 200석으로 조정하는

것이 현재의 결정에 따르는 것보다 합리적이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거듭 말하지만 현재의 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향후 1:2의 비율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또 다시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래는 지역구를 200석으로 축소하고 이를 16개 광역시·도(세종은 충남에 포함)의 선거구에 적용했을 때, 각 광역시·도의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하면 되는지를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 지역구 조정

전국의 지역구 의석이 200석으로 축소되면, 서울시 지역구 수는 현행 48석에서 40석으로 8석이 줄게 된다. 아래 표는 기존 48개 지역구 중에서 평균인구보다 ± 25 퍼센트를 초과한 19개 지역구 가운데 16개를 8개로 통합하여 40개로 만든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3개 지역구의 경우에도 주변 지역구와 일부 조정을 거치게 되면, 40개의 지역구가 완성되고 서울시 유권자의 권리는 현재보다 훨씬 더 동등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선거구 조정방식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연방선거법 3조는 각 선거구의 인구수가 '전체 선거구 평균인구'와 비교하여 ± 25 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해당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선거구의 상당수는 행정구역이 다른 주변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어차피 각 선거구의 인구수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오차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표3> 평균인구에 따른 서울시의 선거구 조정결과(48석→40석)

순 번	선거구	기존 지역구 인구 ¹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A)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B) ² 간 차이[A-B]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 간 초과·부족 비율 [(A-B)÷평균인구]	선거구 통합·조정 여부
1	종로구	169,257	305,320	48,280	18.8%	통합1
	중구	136,063				
2	용산구	248,035	248,035	-9,005	-3.5%	
3	성동구갑	160,370	301,100	44,060	17.1%	통합2
	성동구을	140,730				
4	광진구갑	186,278	372,606	115,566	45.0%	통합3 중랑구와 조정
	광진구을	186,328				
5	동대문구갑	195,036	366,819	109,779	42.7%	통합4 성북구/중랑 구와 조정
	동대문구을	171,783				
6	중랑구갑	196,621	196,621	-60,419	-23.5%	
7	중랑구을	226,445	226,445	-30,595	-11.9%	
8	성북구갑	247,244	247,244	-9,796	-3.8%	
9	성북구을	238,769	238,769	-18,271	-7.1%	
10	강북구갑	167,608	346,552	89,512	34.8%	통합5 성북구와 조정
	강북구을	178,944				
11	도봉구갑	176,518	365,203	108,163	42.1%	통합6 노원구와 조정
	도봉구을	188,685				
12	노원구갑	177,906	177,906	-79,134	-30.8%	
13	노원구을	220,773	220,773	-36,267	-14.1%	
14	노원구병	205,067	205,067	-51,973	-20.2%	
15	은평구갑	209,579	209,579	-47,461	-18.5%	
16	은평구을	289,471	289,471	32,431	12.6%	
17	서대문구갑	156,886	314,461	57,421	22.3%	통합7
	서대문구을	157,575				
18	마포구갑	154,709	390,433	133,393	51.9%	통합8 은평구와
	마포구을	235,724				

						조정
19	양천구갑	267,971	267,971	10,931	4.3%	
20	양천구을	232,691	232,691	-24,349	-9.5%	
21	강서구갑	303,867	303,867	46,827	18.2%	
22	강서구을	265,919	265,919	8,879	3.5%	
23	구로구갑	234,401	234,401	-22,639	-8.8%	
24	구로구을	194,585	194,585	-62,455	-24.3%	
25	금천구	244,311	244,311	-12,729	-5.0%	
26	영등포구갑	208,662	208,662	-48,378	-18.8%	
27	영등포구을	189,200	189,200	-67,840	-26.4%	양천구와 조정
28	동작구갑	219,793	219,793	-37,247	-14.5%	
29	동작구을	183,279	183,279	-73,761	-28.7%	관악구와 조정
30	관악구갑	277,984	277,984	20,944	8.1%	
31	관악구을	249,547	249,547	-7,493	-2.9%	
32	서초구갑	218,738	218,738	-38,302	-14.9%	
33	서초구을	220,481	220,481	-36,559	-14.2%	
34	강남구갑	309,776	309,776	52,736	20.5%	
35	강남구을	259,151	259,151	2,111	0.8%	
36	송파구갑	210,627	210,627	-46,413	-18.1%	
37	송파구을	217,815	217,815	-39,225	-15.3%	
38	송파구병	256,431	256,431	-609	-0.2%	
39	강동구갑	275,151	275,151	18,111	7.0%	
40	강동구을	218,806	218,806	-38,234	-14.9%	
	합계	10,281,590	10,281,590			

¹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² 서울시 평균인구(B)는 257,040명

기존의 48개 선거구 중에서 인구수가 평균인구(25만 7040명)의 ±25%를 초과하는, 즉 인구수가 부족하여 통합의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총 19개이다. 나머지 29개 선거구는 지역의 인구수가 약 25만 명에 가

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수가 평균인구에 현저히 미달하는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성동구을>, <서대문구갑+서대문구을>의 6개 지역은 각각 3개의 선거구로 통합된다. 이곳들은 통합 인구수가 평균인구와 크게 차이가 없어서 더 이상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광진구갑+광진구을>은 통합 후 인구 과다로 일부 지역을 중랑구 지역구에 넘겨야 한다. <동대문구갑+동대문구을>도 마찬가지로 통합 후 일부 지역을 성북구 및 중랑구와 조정해야 한다.

<강북구갑+강북구을>은 통합하여 일부 지역을 성북구에 넘겨야 한다. 중랑구와 성북구의 4개 선거구들은 모두 평균인구보다 적게는 -4퍼센트에서 많게는 -24퍼센트 정도 부족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도봉구갑+도봉구을>은 통합 후 일부지역을 노원구와 조정하면 된다. <마포구갑+마포구을>은 통합하여 일부지역을 은평구에 넘기면 된다. <마포구을>의 인구수는 23만 5000명으로 평균인구에 가까우나 <마포구갑>의 인구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통합이 불가피하다.

선거구가 통합되지는 않으나 인구수가 부족한 <노원구갑>(-30.8%)은 도봉구의 일부 지역을 받아야 하고, <영등포구을>(-26.4%)은 양천구에서 일부 인구를 받아야 하며, 마찬가지로 <동작구을>(-28.7%)은 관악구와 일부 지역을 조정하면 된다.

인천시 선거구 조정

인천시는 지역구 의석이 기존 12석에서 11석으로 1석이 줄어들지만, 비례의석이 6석 늘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천시의 총 의석수는 17석으로 5석이 증가하게 된다.

<표4> 평균인구에 따른 인천시의 선거구 조정결과(12석→11석)

순번	선거구	기존 지역구 인구 ¹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A)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B) ² 간 차이[A-B]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 간 초과·부족 비율 [(A-B)÷평균인구]	선거구 통합·조정 여부
1	중구동구용진군	191,730	191,730	-64,029	-25.0%	연수구와 조정
2	남구갑	202,298	202,298	-53,461	-20.9%	
3	남구을	215,996	215,996	-39,763	-15.5%	
4	연수구	289,171	289,171	33,412	13.1%	
5	남동구갑	305,718	305,718	49,959	19.5%	
6	남동구을	191,878	191,878	-63,881	-25.0%	부평구갑 또는 부평구을과 조정
7	부평구갑	275,810	275,810	20,051	7.8%	
8	부평구을	285,563	285,563	29,804	11.7%	
9	계양구갑	167,845	344,588	88,829	34.7%	통합 ¹ 후 서구강화군 갑 또는 서구강화군 을과 조정
10	계양구을	176,743				
11	서구강화군갑	306,291	306,291	50,532	19.8%	
12	서구강화군을	204,306	204,306	-51,453	-20.1%	
합계		2,813,349	2,813,349			

¹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기준

² 인천시 평균인구(B)는 255,759명

평균인구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할 경우, 인천시에서는 <계양구갑>과 <계양구을>의 지역구만 통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그 가운데 일부 지역을 <서구강화군갑> 또는 <서구강화군을>과 조정하면 된다. 인구수가 평균인구보다 25% 부족한 <중구동구옹진군>은 <연수구>로부터 일부 지역을 넘겨받아 인구수를 늘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남동구을>도 <부평구갑> 또는 <부평구을>로부터 일부 지역을 넘겨받아야 한다. <남구갑>과 <남구을>은 <남동구갑>과 일부 지역들을 조정하여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천시는 일부 지역에서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평균인구수를 초과하는 지역구가 다섯 군데에 달해 나머지 지역들과 조정을 하면 큰 무리 없이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구 조정에 따른 현역의원들 사이의 갈등도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선거구 조정

그동안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경기도의 경우에는 기존 52석에서 47석으로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5석만 줄이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경기도의 선거구를 조정한 것이 아래 <표5>이다.

<표5> 평균인구에 따른 경기도의 선거구 조정결과(52석→47석)

순번	선거구	기존 지역구 인구 ¹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A)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B) ² 간 차이[A-B]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 간 초과·부족 비율 [(A-B)÷평균인구]	선거구 통합·조정 여부
1	수원시갑(장안구)	292,023	292,023	36,943	14.5%	
2	수원시을(권선구)	285,964	285,964	30,884	12.1%	
3	수원시병(팔달구)	251,566	251,566	- 3,514	-1.4%	
4	수원시정(영통구)	274,119	274,119	19,039	7.5%	
5	성남시수정구	235,056	235,056	- 20,024	-7.9%	
6	성남시중원구	254,924	254,924	- 156	-0.1%	
7	성남시분당구갑	277,920	277,920	22,840	9.0%	
8	성남시분당구을	214,417	214,417	- 40,663	-15.9%	성남시분당구 갑과 조정
9	의정부시갑	207,157	207,157	- 47,923	-18.8%	남양주시와 조정
10	의정부시을	223,413	223,413	- 31,667	-12.4%	
11	안양시만안구	260,472	260,472	5,392	2.1%	
12	안양시동안구갑	175,308	353,979	98,899	38.8%	통합1 의왕시과천시 및 시흥시와 조정
13	안양시동안구을	178,671				
14	부천시원미구갑	174,744				통합2(+부천시 오정구)
15	부천시원미구을	272,849	272,849	17,769	7.0%	
16	부천시소사구	232,009	232,009	- 23,071	-9.0%	
17	부천시오정구	193,657	368,401	113,321	44.4%	통합2(+부천시 원미구갑) 부천시소사구 와 조정
18	광명시갑	165,790	355,767	100,687	39.5%	통합3 부천시와 조정

19	광명시을	189,977				
20	평택시갑	185,693	185,693	- 69,387	-27.2%	평택시을과 조정
21	평택시을	243,514	243,514	- 11,566	-4.5%	
22	양주시동두천시	296,916	296,916	41,836	16.4%	파주시와 조정
23	안산시상록구갑	216,148	381,188	126,108	49.4%	통합4 화성시와 조정
24	안산시상록구을	165,040				
25	안산시단원구갑	184,795	334,308	79,228	31.1%	통합5 시흥시와 조정
26	안산시단원구을	149,513				
27	고양시덕양구갑	207,359	207,359	- 47,721	-18.7%	고양시일산동 구 및 일산서구와 조정
28	고양시덕양구을	184,094	184,094	- 70,986	-27.8%	
29	고양시일산동구	279,964	279,964	24,884	9.8%	
30	고양시일산서구	292,078	292,078	36,998	14.5%	
31	의왕시과천시	222,927	222,927	- 32,153	-12.6%	
32	구리시	194,644	194,644	- 60,436	-23.7%	남양주시와 조정
33	남양주시갑	290,008	290,008	34,928	13.7%	
34	남양주시을	291,552	291,552	36,472	14.3%	
35	오산시	195,290	195,290	- 59,790	-23.4%	화성시와 조정
36	화성시갑	239,211	239,211	- 15,869	-6.2%	
37	화성시을	279,325	279,325	24,245	9.5%	
38	시흥시갑	214,624	214,624	- 40,456	-15.9%	안산시상록구 와 조정
39	시흥시을	186,237	186,237	- 68,843	-27.0%	안산시단원구 와 조정
40	군포시	287,462	287,462	32,382	12.7%	
41	하남시	148,165	148,165	-106,915	-41.9%	남양주시와 조정
42	파주시갑	195,540	195,540	- 59,540	-23.3%	양주시동두천 시와 조정
43	파주시을	188,578	188,578	- 66,502	-26.1%	

44	용인시갑	305,278	305,278	50,198	19.7%	안성시와 조정
45	용인시을	306,708	306,708	51,628	20.2%	
46	용인시병	290,289	290,289	35,209	13.8%	
47	안성시	181,104	181,104	- 73,976	-29.0%	용인시와 조정
48	김포시	263,331	263,331	8,251	3.2%	
49	광주시	267,383	267,383	12,303	4.8%	
50	포천시연천군	203,153	203,153	- 51,927	-20.4%	양주시동두천시와 조정
51	이천시	204,477	204,477	- 50,603	-19.8%	광주시 및 여주군과 조정
52	여주군양평군가평군	268,549	268,549	13,469	5.3%	
합계		11,988,985	11,988,985			

¹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기준

² 경기도 평균인구(B)는 255,080명

52석을 47석으로 5석 줄이기 위하여 인구수가 부족한 10개의 지역구를 5개로 통합한다. 이 통합의 결과로 과도하게 늘어난 선거구의 인구는 다시 주변의 부족한 인구수를 가진 지역구들과 조정한다. 서로 통합해야 하는 지역구는 '안양시동안구갑'과 '안양시동안구을', '부천시원미구갑'과 '부천시오정구', '광명시갑'과 '광명시을', '안산시상록구갑'과 '안산시상록구을', 그리고 '안산시단원구갑'과 '안산시단원구을'이다.

이 밖에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인 25만 5080명의 $\pm 15\%$ 를 넘어서는 17개 지역구들을 주변 지역구와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선거구 획정은 완료된다. 대체로 약 50%에 달하는 선거구들이 이미 평균인구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 광주, 울산시의 선거구 조정

광주, 대전, 울산 3곳 광역시의 현행 의석수를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떻게 이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보겠다. <표6>에서 보듯이 광주 인구는 147만 명인데 국회의원 수가 8명인 반면에, 대전은 152만 명으로 5만 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원 수는 6명이다. 의석 당 인구수도 광주가 18만 명에 1석인 반면, 대전은 25만 명당 1석으로 선거구당 7만 명이나 차이가 난다.

울산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114만 명으로 대전보다 38만 명이나 적지만, 의원 수는 6명으로 대전과 동일하다. 의석 당 인구수는 광주보다는 조금 많지만, 대전보다는 6만 명 이상 부족하다. 대전 유권자들의 권리가 광주나 울산에 비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그동안 왜 고쳐지지 않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표6> 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 선거구 조정안 비교

	인구 (2012년 기준)	기존의석 (의석 당 인구수)	현재기준에 따를 경우 (의석 당 인구수)	저자 개정안/ 선관위 제안 (의석 당 인구수)
광주	1,467,451명	8석 (183,431명)	8석 (183,431명)	6석 (244,575명)
대전	1,520,471명	6석 (253,412명)	7석 (217,210명)	6석 (253,412명)
울산	1,138,001명	6석 (189,667명)	6석 (189,667명)	5석 (227,600명)

누가 보아도 불합리한 것을 알 수 있는 이 문제는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현재는 선거구 간 인구수 격차를 1:2 이내로 하도록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는 현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 또한 위 표에 잘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광주에서는 '동구' 선거구의 인구가 부족하여 통합대상이지만, '북구'는 인구초과로 분구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결정에 따르더라도 지역구 수는 8개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대전에서는 '유성구'가 분리 대상이라 의석수가 기존 6석에서 7석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전은 광주보다 더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후에도 의석수는 여전히 1석이 부족하게 된다.

결국 현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인구수와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모순점은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안은 필자의 개정안처럼 광역단위의 전체 지역구를 평균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를 경우 광주는 2석 줄여 6석으로, 대전은 현행 그대로 6석, 울산은 1석 줄여 5석으로 하면 된다. 이를 현행 지역구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조정될 수 있다.

<표7> 평균인구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선거구 조정결과(8석→6석)

순번	선거구	기존 지역구 인구 ¹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A)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B) ² 간 차이[A-B]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 간 초과·부족 비율 [(A-B)÷평균인구]	선거구 통합·조정 여부
1	동구	106,983	269,115	24,540	10.0%	통합1
2	북구갑	162,132				
3	북구을	282,637	282,637	38,062	15.6%	광산구을과 조정
4	서구갑	153,353	318,267	73,692	30.1%	통합2 광산구갑과 조정
5	서구을	164,914				
6	남구	218,982	218,982	- 25,593	-10.5%	
7	광산구갑	170,174	170,174	- 74,401	-30.4%	통합 서구와 조정
8	광산구을	208,276	208,276	- 36,299	-14.8%	북구을과 조정
합계		1,467,451	1,467,451			

¹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² 광주 평균인구(B)는 244,575명

광주는 <표7>에서 보듯이 현행 선거구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동구'와 '북구갑'을 통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서구갑'과 '서구을'은 통합한 후 일부 지역을 '광산구갑'으로 이전하면 된다. 그밖에 '북구을'의 일부지역을 '광산구을'로 옮겨야 한다. 이러한 일부 지역의 조정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에서 '하지 못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면 된다.

<표8> 평균인구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선거구 조정결과(6석→6석)

순번	선거구	기존 지역구 인구 ¹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A)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B) ² 간 차이[A-B]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 간 초과·부족 비율 [(A-B)÷평균인구]	선거구 통합·조정 여부
1	동구	252,924	252,924	- 488	-0.2%	
2	중구	264,879	264,879	11,467	4.5%	
3	서구갑	241,775	241,775	- 11,637	-4.6%	
4	서구을	255,952	255,952	2,540	1.0%	
5	유성구	299,326	299,326	45,914	18.1%	대덕구와 조정
6	대덕구	205,615	205,615	- 47,797	-18.9%	유성구와 조정
	합계	1,467,451	1,467,451			

¹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² 대전시 평균인구(B)는 253,412명

대전의 현행 선거구는 '표3'에서 보듯이 대부분 지역구가 평균인구수에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별다른 조정이 필요치 않다. 다만 '유성구'의 인구수가 평균보다 18% 이상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부족한

바로 옆의 '대덕구'에 일부 지역을 이전하면 대전지역의 선거구 조정은 완료된다.

<표9> 평균인구에 따른 울산광역시의 선거구 조정결과(6석→5석)

순번	선거구	기존 지역구 인구 ¹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A)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B) ² 간 차이[A-B]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 간 초과·부족 비율 [(A-B)÷평균인구]	선거구 통합·조정 여부
1	중구	232,750	232,750	5,150	2.3%	
2	남구갑	181,637	343,948	116,348	51.1%	통합1 동구, 북구와 조정
3	남구을	162,311				
4	동구	173,051	173,051	- 54,549	-24.0%	통합 남구와 조정
5	북구	182,891	182,891	- 44,709	-19.6%	통합 남구와 조정
6	울주군	205,361	205,361	- 22,239	-9.8%	
합계		1,138,001	1,138,001			

¹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² 울산시 평균인구(B)는 227,600명

울산은 인구수가 어정쩡한 상황으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지역구 당 평균인구수가 적은 편이다. 그런데 최초 광역시·도별 의석 배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1석만 줄이면 된다. 구체적으로 '남구갑'과 '남구을'을 통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그 일부 지역을 각각 '동구'

와 '복구'에 넘기면 된다. 하지만 지역구 당 평균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향후 다른 광역시·도의 인구변화에 따라 의석수가 더 감소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지역구 의석의 조정이 완료되면, 각각 광주는 2석, 울산은 1석이 감소하고, 대전은 현행 그대로 변화가 없게 된다. 그러나 필자의 개정안에 따를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가 100석으로 늘어나면서 광주 3석, 대전 3석, 울산 2석의 비례대표를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비록 광주와 울산의 지역구 의석수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소하지만, 이러한 비례대표를 감안할 경우 이 지역들의 총 의석수는 현재보다 광주 1석, 대전 3석, 울산 1석이 증가하게 된다.

선관위 제안을 따를 경우 비례대표가 100석으로 늘어나는 것은 필자의 개정안과 동일하지만, 필자가 비례대표의 배분을 16개(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광역단위로 하는 것에 반해, 선관위는 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하기 때문에 각 광역시·도의 총 의석수는 위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6개 권역으로 구분할 경우, 6개 지역들 간 새로운 지역주의가 나타날 수 있고, 또 한 권역 내 광역단체들 사이의 격차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문제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광역단위로 권역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도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독일식 연방상원(Bundesrat) 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광역단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남·전북·강원·충남·충북의 선거구 조정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의 현재 의원 수를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 <표1>에서 보듯이 충북은 강원도보다 인구가 2만 명 이상 많은데, 의석수는 1석이 적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은 전북보다 24만 명, 전남보다 20만 명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동일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석 당 인구수를 비교해 보아도 충남과 충북의 유권자들은 강원도, 전북, 전남에 비해 불이익을 보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른 경우 강원도는 2석, 충북은 1석, 충남은 그대로, 전북과 전남은 각 2석씩 감소하게 되고, 의석 당 인구수는 대체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필자의 개정안이나 선관위 제안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또 다른 광역시·도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바람직하다.

또 필자의 제안대로 광역시·도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경우, 광역 단위에서 전체 의석이 줄어드는 지역은 없다. 강원도는 지역구를 기존 9석에서 6석으로 줄여야 하지만, 비례의석이 3석 배정되기 때문에 전체 의석은 변하지 않는다. 충북은 지역구가 2석 줄지만, 비례 의석이 3석 배정되어 전체 의석은 1석 늘어나게 된다. 충남(세종시 포함)은 지역구가 3석 줄어들지만, 비례가 4석 배분되어 전체 의석은 1석 증가한다.

<표1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의 선거구 조정안 비교

	인구 (2012년 기준)	기존의석 (의석 당 인구수)	현재기준에 따를 경우 (의석 당 인구수)	저자 개정안/ 선관위 제안 (의석 당 인구수)
강원도	1,536,794명	9석 170,755명	7석 219,542명	6석 256,132명
충청북도	1,558,125명	8석 194,766	7석 222,589	6석 259,688
충청남도 (세종시 포함)	2,115,649명	11석 211,565	11석 211,565	8석 264,456
전라북도	1,873,477명	11석 170,316	9석 208,164	7석 267,640
전라남도	1,911,473명	11석 173,770	9석 212,386	8석 238,934

이와 유사하게 전북도 지역구가 11석에서 7석으로 4석이 감소하지만, 비례 의석을 4석 받게 되어 전체 의석은 기존의석수와 차이가 없고, 전남은 지역구가 3석 줄어들지만, 비례 의석이 4석 배정되어 전체의석은 오히려 1석이 늘게 된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11> 평균인구에 따른 강원도의 선거구 조정결과(9석→6석)

순번	선거구	기존 지역구 인구 ¹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A)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B) ² 간 차이[A-B]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 간 초과·부족 비율 [(A-B)÷평균인구]	선거구 통합·조정 여부
1	춘천시	273,301	273,301	17,169	6.7%	
2	원주시갑	159,391	321,483	65,351	25.5%	통합1 홍천군/횡성군과 조정
3	원주시을	162,092				
4	홍천군횡성군	114,056	197,692	-58,440	-22.8%	평창군/영월군 포함+원주시와 조정
5	강릉시	217,496	245,309	-10,823	-4.2%	양양군 포함
6	동해시삼척시	167,337	257,422	1,290	0.5%	통합2 평창군/영월군 제외
7	태백시영월군 평창군정선군	173,721				
8	속초시고성군 양양군	141,888	241,587	-14,545	-5.7%	통합3 양양군 제외
9	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	127,512				
합계		1,536,794	1,536,794			

¹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² 강원도 평균인구(B)는 256,132명

필자의 개정안을 따를 경우, 강원도는 면적은 넓지만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먼저 '원주시갑' 과 '원주시을'을 통합하고, 그 중 일부 지역을 '홍천군 횡성군' 지역구로

이전한다. 두 번째로 '동해시 삼척시'와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을 통합하는데, 이 가운데 '평창군'과 '영월군'은 '홍천군 횡성군' 지역구로 넘긴다. 끝으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과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을 통합하되, 여기서 '양양군'은 따로 떼어 '강릉시' 지역구와 합친다. 이렇게 하면 9개 지역구가 6개로 조정되고, 각 지역구는 평균인구수에 근접하게 된다.

<표12> 평균인구에 따른 중복의 선거구 조정결과(8석→6석)

순번	선거구	기존 지역구 인구 ¹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A)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B) ² 간 차이[A-B]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 간 초과·부족 비율 [(A-B)÷평균인구]	선거구 통합·조정 여부
1	청주시상당구	241,449	241,449	- 18,239	-7.0%	
2	청주시흥덕구갑	212,263	421,831	162,144	62.4%	통합1 '청원군/민중'과 '증평군/진천군'과 조정
3	청주시흥덕구을	209,568				
4	청원군	152,252	290,971	31,284	12.0%	통합2
5	보은군옥천군영동군	138,719				
6	제천시단양군	169,108	169,108	- 90,580	-34.9%	'충주시 일부'를 포함
7	충주시	208,320	208,320	- 51,368	-19.8%	'음성군/괴산군'을 포함
8	증평군진천군괴산군횡성군	226,446	226,446	- 33,242	-12.8%	'충주시 일부'+청원군 일부'+증평군/진천군
합계		1,558,125	1,558,125			

¹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² 충북 평균인구(B)는 259,688명

충북은 8석의 지역구를 6석으로 줄이면 되지만, 행정구역별 인구 분포가 어중간하여 광역시·도들 가운데 선거구 조정이 가장 어려운 지역 중의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청주시 흥덕구갑'과 '청주시 흥덕구을'을 통합하여 그 가운데 일부 지역을 '청원군' 및 '증평군 진천군' 지역구로 이전한다. 또 '청원군'과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을 합치면 통합은 완료된다.

하지만 '제천시 단양군' 지역구는 인구수가 부족한 데다 광역단위의 경계에 둘러싸여 주변 지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주시의 일부 지역을 넘겨받아야 하고, '충주시' 선거구는 반대편에 위치한 '음성군'과 '괴산군'을 안아야 한다.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지역구는 분리하여 '음성군'과 '괴산군'을 '충주시' 선거구로 이전하고, 그 대신에 '청주시 일부'와 '청원군 일부'를 넘겨받아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해야 한다.

<표13> 평균인구에 따른 충남(세종시 포함)의 선거구 조정결과(11석 →8석)

순번	선거구	기존 지역구 인구 ¹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A)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B) ² 간 차이[A-B]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 간 초과·부족 비율 [(A-B)÷평균인구]	선거구 통합·조정 여부
1	천안시갑	297,574	297,574	33,118	12.5%	'공주시세종시'와 조정
2	천안시을	277,678	277,678	13,222	5.0%	
3	공주시	118,491	218,060	- 6,396	-17.5%	통합1 '천안시'와 조정

4	세종시	99,569					
5	보령시서천군	165,309	271,209	6,753	2.6%	통합2	
6	부여군청양군	105,900					
7	아산시	276,052	276,052	11,596	4.4%		
8	서산시태안군	224,214	224,214	- 40,242	-15.2%		'당진시'와 조정
9	논산시계룡시금산군	225,079	225,079	- 39,377	-14.9%		
10	홍성군예산군	174,282	325,783	61,327	23.2%	통합3 '서산시태안군'과 조정	
11	당진시	151,501					
합계		2,115,649	2,115,649				

¹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² 충남 평균인구(B)는 264,456명

충남의 선거구 조정은 충북에 비해 간단한 편이다. 먼저 '공주시'와 '세종시'를 통합하고, '천안시의 일부 지역'을 넘겨받는다. 두 번째로 '보령시 서천군'과 '부여군 청양군'을 통합한다. 끝으로 '홍성군 예산군'과 '당진시'를 통합한 후, 그 가운데 일부 지역을 '서산시 태안군'으로 이전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기존 11석을 8석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14> 평균인구에 따른 전북의 선거구 조정결과(11석→7석)

순번	선거구	기존 지역구 인구 ¹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A)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B) ² 간 차이[A-B]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 간 초과·부족 비율 [(A-B)÷평균인구]	선거구 통합·조정 여부
----	-----	------------------------	-------------------	--	--	--------------

1	전주시완산구갑	156,978	363,866	96,226	36.0%	통합1 '김제시완주군'과 조정
2	전주시완산구을	206,888				
3	전주시덕진구	284,224	284,224	16,584	6.2%	
4	김제시완주군	177,887	177,887	- 89,753	-33.5%	'전주시완산구'와 조정
5	군산시	277,118	277,118	9,478	3.5%	
6	익산시갑	138,469	308,176	40,536	15.1%	통합2
7	익산시을	169,707				
8	정읍시	120,094	239,098	- 28,542	-10.7%	통합3
9	고창군부안군	119,004				
10	남원시순창군	116,734	223,108	- 44,532	-16.6%	통합4
11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106,374				
합계		1,873,477	1,873,477			

¹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² 전북 평균인구(B)는 267,640명

전북은 기존 11석의 지역구를 7석으로 4석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에 이어서 부산, 경북과 함께 선거구 통합이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선거구 조정은 의외로 간단한 편이다. 먼저 '전주시 완산구갑'과 '전주시 완산구을'을 통합하고, 그 중 일부 지역을 '김제시 완주군'으로 이전한다. 나머지 조정은 단순히 통합하기만 하면 된

다. 구체적으로 '익산시갑'과 '익산시을'을,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을, '남원시 순창군'과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을 통합하면 사실상 조정이 완료된다.

<표15> 평균인구에 따른 전남의 선거구 조정결과(11석→8석)

순번	선거구	기존 지역구 인구 ¹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A)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B) ² 간 차이[A-B]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 간 초과·부족 비율 [(A-B)÷평균인구]	선거구 통합·조정 여부
1	목포시	244,686	244,686	5,752	2.4%	
2	여수시갑	132,629	292,741	53,807	22.5%	통합1
3	여수시을	160,112				
4	순천시곡성군	303,713	303,713	64,779	27.1%	'곡성군'과 '순천시 일부'를 '광양시구례군'으로 이전
5	나주시화순군	157,007	157,007	- 81,927	-34.3%	'영암군'과 '무안군 일부'를 통합
6	광양시구례군	178,210	178,210	- 60,724	-25.4%	'곡성군'과 '순천시 일부'를 통합
7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186,310	186,310	- 52,624	-22.0%	'무안군 일부'를 통합
8	고흥군보성군	120,092	262,591	23,657	9.9%	통합2 '영암군' 제외
9	장흥군강진군영암군	142,499				
10	해남군완도군진도군	165,803	286,215	47,281	19.8%	통합3 '무안군 일부'를 '나주시화순군'으로 이전
11	무안군신안군	120,412				
합계		1,911,473	1,911,473			

¹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² 전남 평균인구(B)는 238,934명

전남은 광역단위 의석수 배정에서 반올림을 통해 추가로 의석수를 얻게 된 행운의 지역이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수가 전북보다 단지 약 3만 7000명 많을 뿐인데, 의석수는 1석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석 당 평균 인구수(약 24만 명)가 다른 곳들에 비해 약간 적은 편이다.

먼저 '여수시갑'과 '여수시을'을 통합한다. 두 번째로 '고흥군 보성군'과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을 통합하는데, 이 가운데 '영암군'을 떼어내어 '나주시 화순군' 지역구로 옮긴다. 끝으로 '해남군 완도군'과 '무안군 신안군'을 통합하고, 여기서 '무안군 일부'는 '나주시 화순군'으로 이전한다.

이와 별도로 '순천시 곡성군' 지역구에서 '곡성군'과 '순천시 일부'를 '광양시 구례군' 지역구로 옮긴다. '나주시 화순군' 지역구는 '영암군'과 '무안군 일부'를 흡수한다.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지역구도 역시 '무안군 일부'를 통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한다.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제주도의 선거구 조정

아래에서 보듯이 5개 지역 간 기존의 의석 당 인구수 차이는 심할 경우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표1>에서 보듯이 헌재가 결정한 기준을 단

순히 따르더라도, 이러한 격차는 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의 제안 대로 의석 당 평균인구수에 따라 의석수를 설정할 경우, 그 격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광역단위 의석배분에서 결정된 대로 의석을 1석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의석 당 평균인구수가 많은 것은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표16>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제주의 선거구 조정안 비교

	인구 (2012년 기준)	기존의석 (의석 당 인구수)	현재기준에 따를 경우 (의석 당 인구수)	저자 개정안/ 선관위 제안 (의석 당 인구수)
부산	3,550,885명	18석 197,271명	17석 208,876명	14석 253,635명
대구	2,509,200명	12석 209,100	12석 209,100	10석 250,920
경북	2,695,595명	15석 179,706	10석 269,560	11석 245,054
경남	3,308,983명	16석 206,811	18석 183,832	13석 254,537
제주	578,708명	3석 192,903	3석 192,903	2석 289,354

<표17> 평균인구에 따른 부산의 선거구 조정결과(18석→14석)

순 번	선거구	기존 지역구 인구 ¹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A)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B) ² 간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 간	선거구 통합·조정 여부
--------	-----	---------------------------	-------------------------	--	------------------------------	-----------------

				차이[A-B]	초과·부족 비율 [(A-B)÷평균인구]	
1	중구동구	148,789	291,338	37,706	14.9%	통합1
2	영도구	142,549				
3	부산진구 갑	205,817	205,817	-47,816	-18.9%	북구강서구와 조정
4	부산진구 을	189,686	189,686	-63,947	-25.2%	북구강서구와 조정
5	북구강서 구갑	164,773	372,628	118,996	46.9%	통합2 부산진구와 조정
6	북구강서 구을	207,855				
7	동래구	282,829	282,829	29,197	11.5%	
8	남구갑	146,426	294,550	40,918	16.1%	통합3 수영구와 조정
9	남구을	148,124				
10	해운대구 기장군갑	306,144	306,144	52,512	20.7%	해운대기장군 을과 조정
11	해운대구 기장군을	231,190	231,190	-22,443	-8.8%	
12	사하구갑	153,721	354,908	101,276	39.9%	통합4 서구와 조정
13	사하구을	201,187				
14	서구	123,402	123,402	-130,231	-51.3%	사하구와 조정
15	금정구	254,459	254,459	827	0.3%	
16	연제구	213,143	213,143	-40,490	-16.0%	동래구와 조정
17	수영구	176,441	176,441	-77,192	-30.4%	남구와 조정
18	사상구	254,320	254,320	688	0.3%	
합계		3,550,855	3,550,855			

¹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² 부산시 평균인구(B)는 253,632명

부산은 기존 18개 지역구를 14개로 줄여야 한다. 먼저 중구동구와 영도구를 통합한다. 두 번째로 북구강서구 갑과 을을 통합하여 25만 명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산진구 갑과 을에 배분한다. 세 번째는 남구 갑과 을을 통합하여 남는 부분을 수영구와 조정한다. 끝으로 사하구 갑과 을을 통합하여 서구와 조정하면 선거구 조정이 완료된다.

<표18> 평균인구에 따른 대구의 선거구 조정결과(12석→10석)

순번	선거구	기존 지역구 인구 ¹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A)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B) ² 간 차이[A-B]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 간 초과·부족 비율 [(A-B)÷평균인구]	선거구 통합·조정 여부
1	중구남구	245,284	245,284	-5,636	-2.2%	
2	동구갑	137,016	341,390	90,470	36.1%	통합 ¹ 북구 및 수성구을과 조정
3	동구을	204,374				
4	서구	221,961	221,961	-28,959	-11.5%	
5	북구갑	149,527	149,527	-101,393	-40.4%	북구을과 조정
6	북구을	301,456	301,456	50,536	20.1%	북구갑과 조정
7	수성구갑	268,071	268,071	17,151	6.8%	

8	수성구을	193,263	193,263	-57,657	-23.0%	동구와 조정
9	달서구을	243,457	243,457	-7,463	-3.0%	
10	달서구갑	192,700	363,154	112,234	44.7%	통합 ² 달성군과 조정
11	달서구병	170,454				
12	달성군	181,637	181,637	-69,283	-27.6%	달서구와 조정
합계		2,509,200	2,509,200			

¹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² 대구시 평균인구(B)는 250,920명

대구시는 동구 갑과 을을 통합하여 북구 및 수성구을과 조정한다. 그리고 달서구 갑과 병을 통합하여 달성군과 조정하면 선거구 조정이 완료된다. 그 밖의 지역들은 약간의 조정을 통해 평균인구수에 근접하고 있으며, 특히 세 군데 지역은 아무런 조정 없이 이미 평균인구수와 거의 일치한다.

<표19> 평균인구에 따른 경북의 선거구 조정결과(15석→11석)

순번	선거구	기존 지역구 인구 ¹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A)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B) ² 간 차이[A-B]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 간 초과·부족 비율 [(A-B)÷평균인구]	선거구 통합·조정 여부
1	포항시북구	265,497	265,497	20,443	8.3%	
2	포항시남구울릉군	262,773	262,773	17,719	7.2%	

3	경주시	265,093	265,093	20,039	8.2%	
4	김천시	135,348	239,964	-5,090	-2.1%	통합1
5	상주시	104,616				
6	안동시	167,945	290,498	45,444	18.5%	통합2 군위.의성.청송 군과 조정
7	문경시 예천군	122,553				
8	구미시갑	226,478	226,478	-18,576	-7.6%	
9	구미시을	187,991	187,991	-57,063	-23.3%	구미시갑과 조정
10	영주시	113,354	258,200	13,146	5.4%	통합3
11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144,846				
12	영천시	103,003	211,348	-33,706	-13.8%	통합4
13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108,345				
14	경산시 청도군	288,280	288,280	43,226	17.6%	
15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199,473	199,473	-45,581	-18.6%	
합계		2,695,595	2,695,595			

¹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² 경북 평균인구(B)는 245,054명

경북의 선거구 조정은 먼저 김천시와 상주시를 통합하고, 안동시와 문경시/예천군을 통합하여 일부 인구를 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 넘긴다. 그리고 영주시와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을 통합하고, 끝으로 영천시와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을 통합하면 기존 15석을 11석으로 줄일 수

있다. 이미 5~6곳 지역구는 아무런 조정 없이 평균인구수에 근접하고 있다.

<표20> 평균인구에 따른 경남의 선거구 조정결과(16석→13석)

순번	선거구	기존 지역구 인구 ¹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A)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B) ² 간 차이[A-B]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 간 초과·부족 비율 [(A-B)÷평균인구]	선거구 통합·조정 여부
1	창원시의창구	255,432	255,432	895	0.4%	
2	창원시성산구	247,423	247,423	-7,114	-2.8%	
3	창원시마산합포구	186,070	408,776	154,239	60.6%	통합1 창원시진해구와 조정
4	창원시마산회원구	222,706				
5	창원시진해구	180,672	180,672	-73,865	-29.0%	
6	진주시갑	169,963	336,373	81,836	32.2%	통합2 통영시고성군과 조정
7	진주시을	166,410				
8	통영시고성군	197,255	197,255	-57,282	-22.5%	
9	사천시남해군하동군	215,929	215,929	-38,608	-15.2%	
10	김해시갑	211,365	211,365	-43,172	-17.0%	김해시을과 조정
11	김해시을	296,905	296,905	42,368	16.6%	
12	밀양시창녕군(+함안군)	171,646	238,728	-15,809	-6.2%	통합3 함안군을 통합
13	거제시	232,928	232,928	-21,609	-8.5%	

14	양산시	267,367	267,367	12,830	5.0%	
15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147,006	지역구를 분할하여 함안군은 밀양시/창녕군과 통합하여 지역구를 만들고, 의령군/합천군은 산청군/함양군/거창군에 통합하여 지역구를 만든다.			
16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의령군 합천군)	139,906	219,830	-34,707	-13.6%	통합3
합계		3,308,983	3,308,983			

¹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² 경남 평균인구(B)는 254,537명

경남은 3석의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먼저 창원시마산합포구와 창원시마산회원구를 통합하여 초과인구를 창원시진해구로 이양한다. 이어서 진주시 갑과 을을 통합하여 통영시/고성군과 조정한다. 끝으로 의령군/함안군/합천군을 분할하여 함안군은 의령군은 밀양시/창녕군과 통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고, 의령군/합천군은 산청군/함양군/거창군과 통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면 된다. 이미 지역구 6곳은 그대로 평균인구수에 근접하고 있다.

<표21> 평균인구에 따른 제주의 선거구 조정결과(3석→2석)

순번	선거구	기존 지역구 인구 ¹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A)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B) ² 간 차이[A-B]	통합·조정 후 지역구 인구와 평균인구 간 초과·부족 비율 [(A-B)÷평균인구]	선거구 통합·조정 여부
1	제주시갑	230,167	230,167	-59,187	-20.5%	서귀포시와 조정

2	제주시읍	195,098	348,541	59,187	20.5%	통합1 제주시읍과 조정
3	서귀포시	153,443				
합계		578,708	578,708			

¹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² 제주도 평균인구(B)는 289,354명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작은 제주도는 광역별 의석배분에서 기존 3석에서 2석으로 조정되었다. 그래서 의석 당 평균인구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많은 편이다. 제주시읍과 서귀포시를 통합하고 일부 인구를 제주시읍과 조정한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비례의석이 1석 배정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전체의석은 현재와 동일하다.